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박은형 분석관

주요 재정지표 변화와 추이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경제성장률(GDP)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통합재정지출 역시 연평균 7.0% 성장 추이
 - 2013년~2022년 GDP 연평균성장률 2.6%, 통합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 6.6%
 - 최근에는 중앙재정의 경우 코로나19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지방재정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세율 인상과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기인하여 규모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규모는 최근 10년간('13~'22) 연평균 증가율 7.0% 수준 확대, 교육자치단체도 연평균 5.4% 증가

[표 1] 주요 경제·재정지표 변화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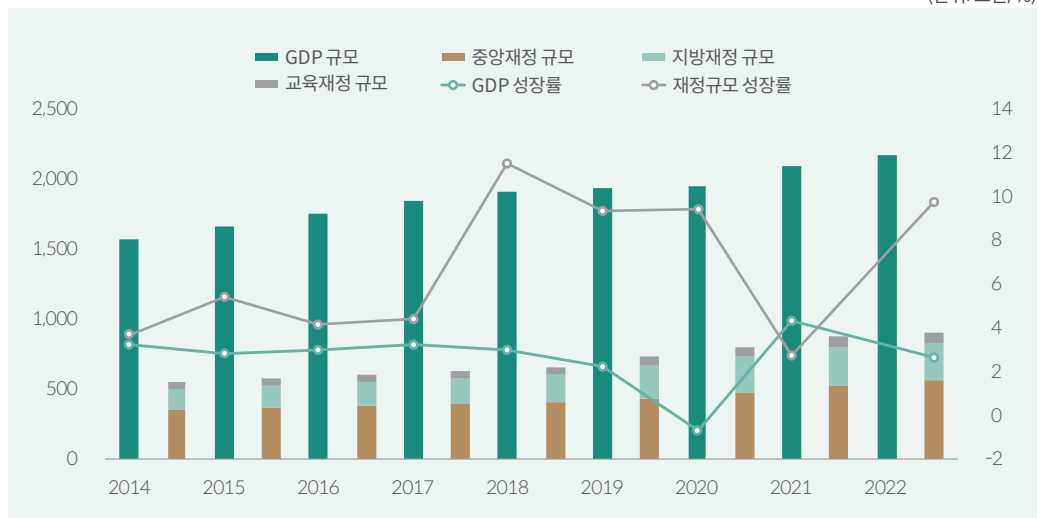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 GDP규모(실질GDP)	1,562.7	1,658.0	1,760.8	1,852.7	1,918.7	1,968.8	2.6
2. 통합재정규모(A+B+C)	547.8	597.8	649.8	791.6	889.2	975.3	6.6
2-1. 중앙정부(A)	342.0	375.4	400.5	469.6	558.0	607.7	6.6
2-2. 지방자치단체(B)	154.4	168.1	190.2	252.7	259.4	284.9	7.0
2-3. 교육자치단체(C)	51.4	54.3	59.1	69.3	71.9	82.7	5.4

주: 각 연도 본예산(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지출액(총지출)

자료: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토대로 작성

[그림 1] 경제성장률과 통합재정지출규모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조원, %)



최근 지방재정 변화(세입측면)

▪ 최근 세입측면에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추세는 완화된 것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9.5조원* 감소

- 2017년 이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노력 등으로 자체·이전수입 모두 증가

•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8년 11%→'23년 25.3%)과 과세대상 자산 가치상승 등으로 증가, 이전수입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에 기인

- 2023년은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보다 수입의 감소 폭 확대 예상

* 2022년 최종예산 대비 2023년 당초예산 세입 기준

[표 2] 지방자치단체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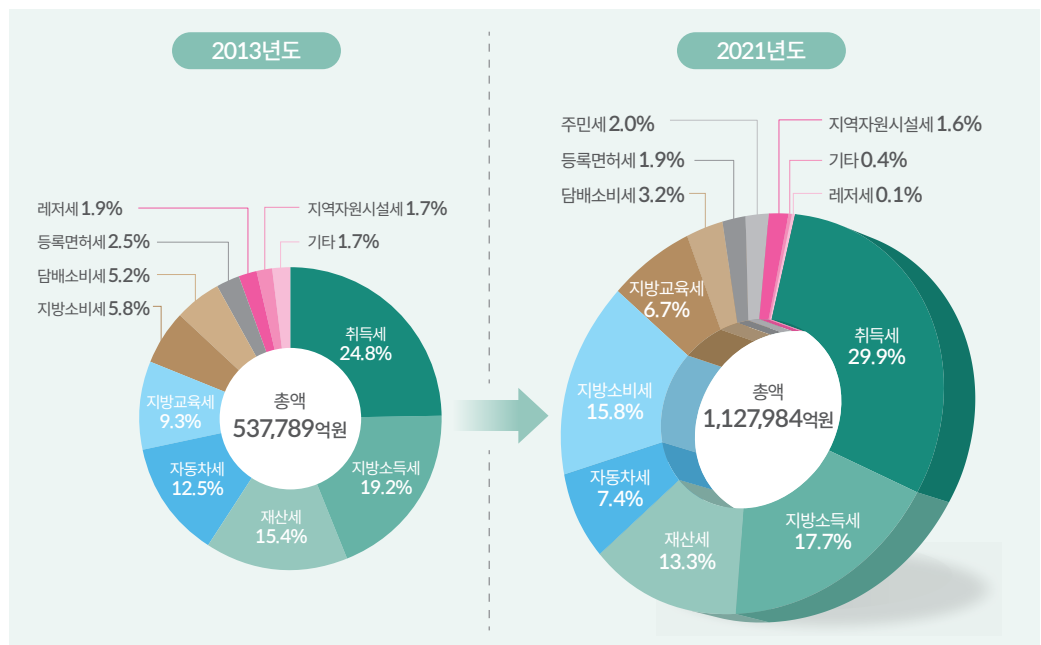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체수입	106.4	110.1	117.1	128.9	142.8	143.9	140.0
- 지방세	80.4	84.3	90.5	102.0	112.8	112.4	115.3
- 세외수입	26.0	25.8	26.6	26.9	30.0	31.5	24.7
이전수입	92.2	99.6	119.4	137.0	144.9	164.0	158.4
- 지방교부세	44.4	49.0	57.7	50.3	59.2	81.0	75.3
- 국고보조금	47.8	50.6	61.7	86.7	85.7	83.0	83.1
자체수입+이전수입	198.6	209.7	236.5	265.9	287.7	307.9	298.4

자료: 연도별 지방재정연감(2021년까지는 결산액,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 자체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구조는 기존 재산과세(재산세, 취득·등록세) 중심에서, 2021년 이후 소비·소득과세가 재산과세와 유사한 비중으로 성장

[그림 2] 지방세 수입 세목별 비중 변화



자료: 각 연도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작성

최근 지방재정 변화(세출측면)

- 세출 역시 세입에 비례하여 증가,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17~'23, 46.8조원 증가),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세출예산의 31.5% 비중

[표 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7		2020		2023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사회복지	49.5	25.6	75.1	29.7	96.3	31.5
인력운영비	25.9	13.4	31.5	12.5	36.5	12.0
환경	19.1	9.9	25.7	10.2	29.3	9.6
교통및물류	17.3	8.9	20.6	8.1	24.6	8.1
국토및지역개발	13.2	6.8	17.5	6.9	17.2	5.6
농림해양수산	12.3	6.4	15.8	6.2	20.4	6.7
일반공공행정	11.9	6.2	13.3	5.3	16.6	5.4
교육	11.7	6.0	14.0	5.5	16.2	5.3
문화및관광	9.8	5.1	12.1	4.8	14.3	4.7
예비비	4.9	2.5	4.5	1.8	4.6	1.5
기타	17.8	9.2	23.0	9.1	29.5	9.6
계	193.2	100	253.2	100	305.4	100

주: 기타에는 기본경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보건, 과학기술 등이 포함됨.

자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토대로 작성

- 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 폭이 상당하여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감소,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출권 향상에 한계

- 최근 팬데믹 대응수요와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확대, 2019년부터 지방 정책사업비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 역전, 지출권 제약

[표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체사업비율		
2017	78.1	79.9	50.6	35.2	193.2
2020	110.4	102.7	48.2	40.1	253.2
2023	139.8	115.6	45.4	50.0	3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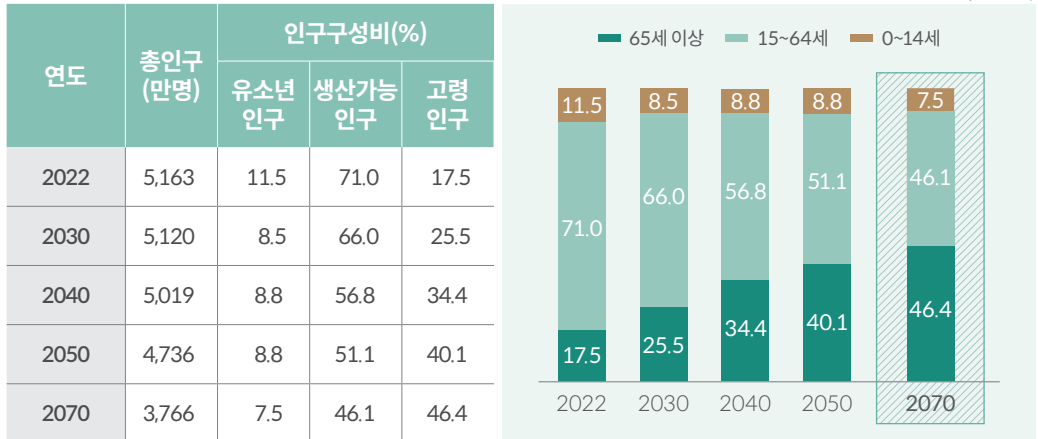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토대로 작성

지방재정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저성장 기조(한국은행, 경제성장률 '23년, 1.6%, '24년, 2.4% 전망)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

[그림 3] 연령대별 인구구성 추계

(단위: %)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70년」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멸 가속화 등 대응이 필요한 재정 현안은 누적
 - OECD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감소를 유발, 주요 지방세 세원인 지방소득세·소비세 감소를 조장하고 재산과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복지 의무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력 약화와 함께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
-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효율성 강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적립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면밀한 상환 계획에 근거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여력 확보 필요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합리화, 지방세 과목구조 개편, 교부세의 배분기준 재설계 등 노력 필요